

# Hansun Brief

발행일: 2018년 6월 8일(통권60호) / 발행인: 박재완 / 발행처: 한반도선진화재단 / 서울 중구 퇴계로 197, 407호 / 전화: 02-2275-8391 / email: hansun@hansun.org / www.hansun.org



## 문재인 정부 1년 국방정책평가와 대안

박 휘 락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

### 목 차

1. 문재인 정부의 성과
2. 문재인 정부의 미흡성
3. 보완의 방향
4. 나가며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 1. 문재인 정부의 성과

첫째, 문재인 정부는 2018년 2월 개최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 분위기를 조성한 후, 이를 통하여 북한의 "비핵화 용의"를 얻어내었다. 그 후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하여 "핵없는 한반도 실현이 공동목표"라는 남북한의 합의를 끌어내었고,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유도하여 미국이 중심이 되어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미사일 시험발사로 고조된 긴장을 완화시킨 측면은 성과로 볼 수 있다.

둘째, 아직까지 세부적인 내용은 계속 토론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이를 통하여 군대 내의 제반 구조 및 운영 차원의 문제들을 대대적으로 교정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국방개혁 2.0'의 기본적인 목표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이고,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작전수행개념과 군 구조 개혁방안을 제시한다는 방향이다.

셋째, 문재인 정부는 국방분야에 내재하고 있는 다양한 '적폐'를 노출시키고 이를 교정하는 효과를 산출한 점이 있다. '공관병 갑질'의 문제화 등을 통하여 더욱 민주화되고, 공정한 군대문화를 요구하고 있고,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에 대한 단죄를 통하여 부당한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은 곤란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군인들에게 합리성을 강조하고, 일과 후의 사생 활도 보장하며, 병사들의 자율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2. 문재인 정부의 미흡성

첫째, 북핵 대응태세 구비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약화되고 있다. 외교적 접근을 통하여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군사적 대비는 그다지 강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대는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하여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고 유사시에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태세를 구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에 계속해오던 "3축 체계" 즉 선제타격을 위한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의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interception)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한국형 대량보복(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은 지속하고 있으나 이를 더욱 강화하거나 그 구비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정치지도자의 독려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핵대응에 관한 국방예산의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북핵 폐기가 가시화되기 이전까지는 다소 위험한 접근일 수 있다.

둘째, "국방개혁 2.0"의 추진도 지체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대대적인 국방개혁을 강조했고, 송영무 국방장관을 임명할 때는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국방분야를 개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2018년 1월 국무총리에 대한 업무보고 기회를 통하여 "국방개혁 2.0"의 추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고, 2018년 4월까지 세부계획을

완성하겠다는 일정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방개혁 2.0"에 대한 청사진은 제시되지 않고 있고, 2018년 5월 11일 송영무 국방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용을 보고하였으나 북·미 정상회담 이후 다시 토론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국방개혁은 안보상황과 상관없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고, 다소의 낭비가 발생하더라도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확고한 안보태세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군의 전문성(professionalism)에 대한 존중이 다소 후퇴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대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하고,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선택한다. 대신에 대통령은 군대의 전문성을 인정해줘야 한다. 그러나 장군 진급 등을 비롯한 군의 고유한 절차와 일정이 정치적 시각에서 조정되는 경우가 없지 않았고, 인사에 있어서도 군의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경향을 중시하는 측면이 지적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부장관을 중심으로 한 군의 단결을 강조하면서, 국방부장관의 위상을 높이고, 군에 관한 세부적인 일에 대하여 청와대에서 관여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3. 보완의 방향

첫째, 북핵대비태세 구비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당연히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여 위협 자체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그것이 성공하지 못할 상황까지 고려하여 군으로 하여금 철저한 대비태세를 강구하게 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국민들은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무기 폐기를 기대하더라도 국방부장관을 중심으로 한 군은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그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반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로 필요한 전력 증강을 체계적으로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보다 더욱 강조되어야 할 국방분야의 과제는 없다.

둘째, "국방개혁 2.0"의 실질적인 추진이다. 이미

계획을 작성하는 데 1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아직도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자칫하면 국방개혁의 모멘텀을 상실할 수 있다. 군이 건의한 내용을 가급적이면 조기에 승인함으로써 "국방개혁 2.0"이 가능하면 빨리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전군적으로 기존의 관행이나 제도 중에서 잘못된 것은 즉각 시정하고, 더욱 바람직한 것을 수용하여 모든 부대와 장병들이 국방개혁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군대와 군인들의 전문성 향상을 더욱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위협을 포함하여 현 시대는 다양한 위협이 대두되고 있고, "제4차 산업혁명"에서 보듯이 기술적인 진화도 예측이 어려울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이 효과적인 대응 방법(ways)을 구상하고, 이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수단(means)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결국 간부들의 전문성이 높아져야한다. 군대는 즉각대응태세를 유지함과 동시에 미래의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군인들이 군사문제를 적극적으로 토의 및 연구하고, 그러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군인들을 진급시켜 나가는 풍토를 고양할 필요가 있다.

#### 4. 나가며

헌법 제66조 2항에서는 대통령에게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정부가 힘을 모아서 추진해야할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북핵 위협은 이러한 대통령과 정부의 책무 수행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임무가 대통령에게 있을 수 없다.

헌법 제66조 2항의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 대부분이 수용하는 안전한 방법을 추구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해서 위험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곤란하다. 국가의 안보는 도박할 수 없고, 도박해서는 곤란하며,

만전지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헌법 66조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재에 비해서 더욱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것인지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평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평화는 달성하기는 쉽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국가가 추구해야할 것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항구적 평화"이다. 대체적으로 지금 당장의 평화에 치중하면 항구적인 평화는 오히려 멀어지고, 항구적인 평화를 추구하려면 지금 당장은 전쟁을 각오해야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중요시할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방안을 더욱 집중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로마의 격언에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 문자후원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